노동자 연대

ws.or.kr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제606호 | 202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값 1,000원

후원 계좌 (주)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이란 전쟁과 한국군 파병 4, 11면

이재명 망언에 분개하는 이주민 운동가들 5면

2027년 예산안 6, 7면

국제 청년 반전 파업과 한국 연대 행동 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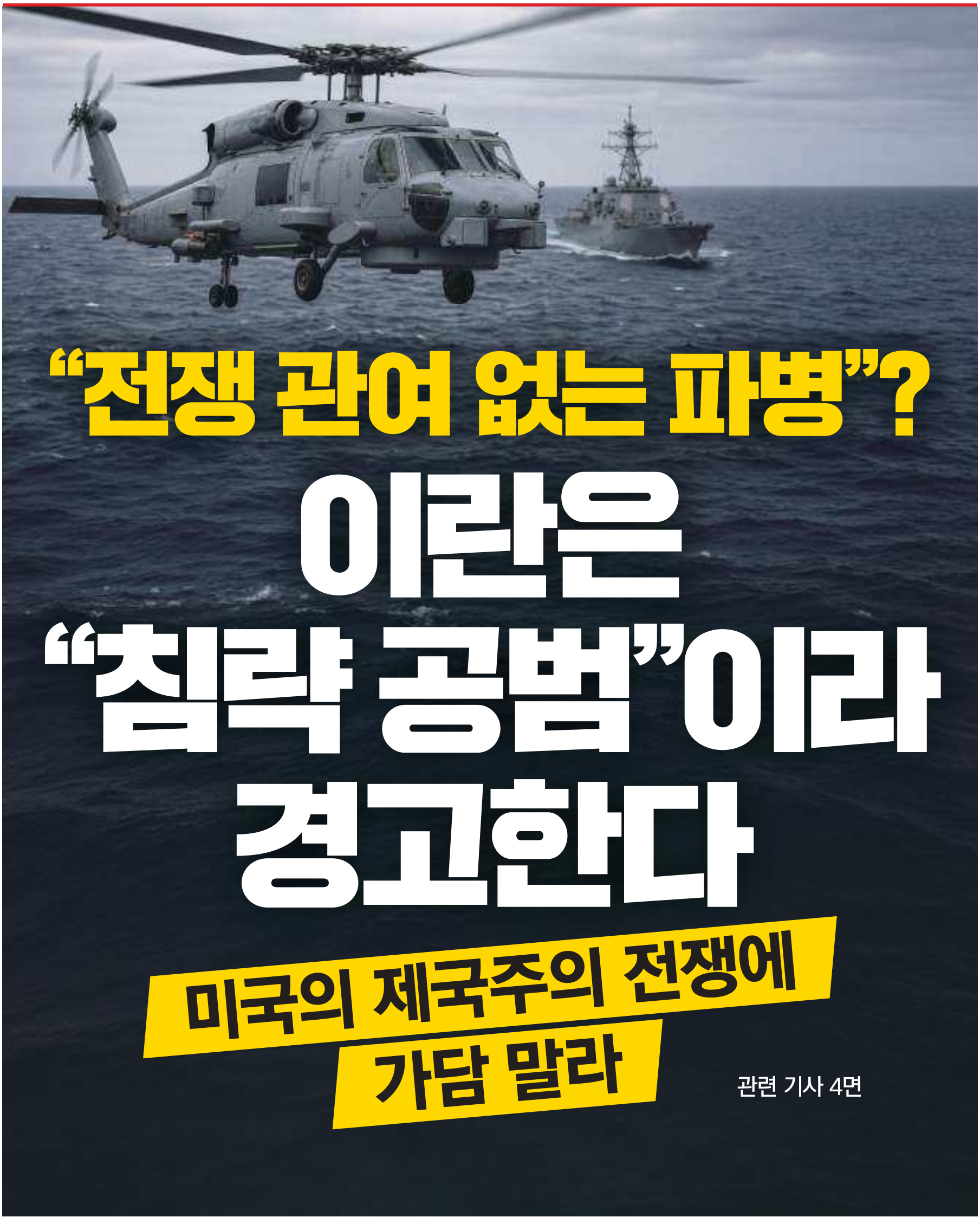
이스라엘 총선 이후 9면

프랑스 저항 10면

조작기소 특검법 12면



미국 중간선거와 그 이후 2, 3면



"전쟁 관여 없는 파병"?

이란은 "침략 공범"이라 경고한다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에 가담 말라

관련 기사 4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극우는 타격을 입었지만 꺾이지는 않았다



사진 출처 백악관

'극우는 이제 끝났다'는 성급한 주장 뒤에는 중도 정치의 책임을 숨기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지난주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 극우 정치인들이 보기 좋게 참패했음이 분명해지자 정치적 중도 세력은 승리에 도취됐다.

자유주의 성향의 〈뉴욕 타임스〉는 "반(反)권위주의 물결이 세계 곳곳의 선거를 휩쓸고 있는 듯하다"며 감격했다.

"권위주의가 슬금슬금 강화되고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데에 고통받아 온 나라들에서 분노한 유권자들이 잇따라 기록적인 숫자로 투표소에 나와 논란의 여지 없는 승리를 안겨 줬고, 그럼으로써 독재의 전진에 제동을 걸었다."

유럽 지도자들 중 인종차별적 포퓰리즘 우파의 도전에 직면한 자들이 특히 감격스러워했다.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는 이렇게 말했다. "브라질이 그런 경우다. 미국도 방금 그렇게 됐다. 그리고 곧 스페인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산체스는 이달 말 선거에서 힘겨운 싸움을 앞두고 있다.

산체스는 극우의 물결이 "더는 커지지 않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타깝게도 이런 식의 일반화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의 내년 대선 승리가 예상된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르펜이 내년 5월 결선투표에서 좌파 후보 장뤼크 멜랑숑을 이길 것이라고 내다본다.

독일에서는 2025년 총선 결과 보수 정당들과 사회민주당의 연립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파시스트가 주도하는 정당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이 급성장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AfD는 27.1퍼센트를 얻어,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보수 정당 기민당(CDU)을 제치고 전국 지지율 1위 정당이 됐다. 기민당은 겨우 19.8퍼센트로 2위로 뒤쳐졌다.

독일은 최대 2029년까지 예정된 선거가 없다. 그러나 메르츠 정부는 이미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조기 총선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극우 전진이 끝났다는 주장이 성급하게 나오는 이유 하나는, 정치적 중도 세력이 바로 자신들 때문에 극우가 성장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한때 사민주의 정당들은 지금 당장의 번영을 약속하고 앞으로는 삶이 더 나아지리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오늘날 그들은 약속하는 것이 없다시피 하다.

그러면서 사민주의 정당을 비롯한 중도 정당들은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사회적 위기의 책임을 이민자 등에게 전가하려고 권위주의적·인종차별적 정책에 기댔다.

그런 정책들이 분노와 울분을 키우고 그것이 다시 극우를 키우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그러자 중도 정당들은 인종차별에서 극우를 "앞서"려 하며 이민 문제에서 우경화했다.

그런 분노와 울분이 가라앉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쓰라림이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몇 극우 정당들이 "여느 정당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 점점 취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극우 정당들은 "반(反)기득권" 세력을 자처하지만, 막상 집권하면 신자유주의 정책과 단절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억만장자들에게 매인 사람으로 여겨졌고, 나이절 퍼라지는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쪽에 자신을 팔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몇몇 우파 정치인들이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타격을 입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요 정치 평론가들은 퍼라지의 영국개혁당이 차기 총선 승리가 따 놓은 당상이라는 듯 "퍼라지 총리"를 운운했다. 이제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극우가 지금 위기에 대응해 더한층 우경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들도 있다.

극우를 키운 인종차별적 증오와 독살스런 분노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는다. 통로 하나가 막히면 증오는 다른 길을 찾는다. 그 길이 더 극단적인 정당이나 지도자일 수도 있고, 거리 운동일 수도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그런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극우 정당 영국회복당은 강경 인종차별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에게 영국개혁당이 아닌 정치적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검은 옷을 입은 파시스트들이 항구를 봉쇄하고, 젊은 난민 신청자들의 집에 무리 지어 쳐들어가 위협하는 일이 여럿 벌어졌다.

영국에서 인종차별 폭동이 일어나 난민 숙소에 불을 지르려 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비슷한 일이 재발할 가능성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따라서 최근 선거 결과들을 근거로 극우가 치명상을 입었다고 진단하는 중도파의 안이한 주장은 그저 낙관이 과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주장이다.

극우를 물리치려면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건설하고, 실패한 신자유주의적 중도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유리 프라사드

출처 Yuri Prasad, 'The far right is hurting but it isn't beaten' (2026. 11. 07) / 번역 김종환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오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86가길 5 3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는 중간선거 패배에도 도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진 출처 백악관
트럼프는 파시스트를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것으로 선거 패배에 응수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해 1월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서 큰 도박을 벌였다. 그리고 크게 잃었다. 트럼프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동원해 살인적인 이주민 사냥을 벌이고,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가 날뛰는 것을 승인하고, 이란 전쟁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수도 워싱턴 DC를 자신의 영광을 기리는 도금된 기념관으로 만들려 했다.

그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공화당의 오랜 아성 텍사스주에서 민주당이 거둔 승리일 것이다. 민주당은 텍사스주의 거의 모든 [상원의원, 정·부주지사, 주 정부 고위직, 주 대법원 판사 등 — 역자] 선거에서 승리했다. "경제적 포퓰리스트"를 자처하는 라틴계 여성 지나 이노호사가 텍사스주 주지사에 당선됐다. 미국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민주당 투표로 표심이 이동했다.

공화당의 참패는 흥미로우면서도 서로 다른 두 물음을 던진다. 공화당의 참패는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자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 투표 결과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이 드러난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인종·연령·성별·학력을 막론하고 전국의 모든 유권자 집단이 다시 민주당 지지로 이동했다. 2024년 대선 때 공화당 지지로 광범하게 이동했던 흐름이 역전된 것이다."

팔레스타인

특히 두 집단이 주목할 만하다.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은 2024년 대선 때 트럼프 지지로 이동했다가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는데, 득표율 차이의 변화가 28퍼센트포인트에 이르렀다. 한편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유권자들은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 지지로 이동한 이래 트럼프 지지층의 중추를 이뤄 왔다. … 어젯밤 [중간선거에서] 대졸 미만 백인 노동계급 유권자들은 대졸 이상 백인 유권자들보다 더 왼쪽으로 이동했다."

질리언 텟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렇게 논평했다. "민주당의 압승은 부유한 자산 소유자들이 평범한 노동자들의 희생에서 득을 보는 'K자형' 경제의 엘리트층에 대한 포퓰리즘적 분노의 울부짖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공화·민주 양당을 오가는 것은 자본주의의 실패로 유권자들의 유동성이 커졌음을 보여 준다. 이런 현상은 영국에서도 볼 수 있다. 2019년에는 보수당이 압승했다가 2024년에는 노동당이 압승했지만, 그 후 노동당 소속의 총리 키어 스타머에 대한 지지는 급속히 무너졌다. 미국 민주당 지도부도 스타머와 마찬가지로 틀에 박힌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자들이다. 지금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지만 그들이 일을 그르친다면, 이르면 2028년 차기 대선에서 판세가 다시 공화당에 유리하게 기울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중간선거에서 일어난 매우 중요한 변화 하나는 오래 지속될 듯하다. 막강한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 AIPAC(미국-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이 대실패를 겪었다는 것이다. 과거 AIPAC은 공화·민주 양당 모두의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유대인 혐오" 낙인을 찍어 팔레스타인 지지 후보들을 낙선시키려던 AIPAC의 이번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 미시간주에서는 AIPAC가 압둘 사예드를 떨어뜨리려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사예드는 결국 무슬림 최초로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이것은 가자지구 인종학살이 낳은 세계적 의식 변화의 한 사례다. 그런 의식 변화는 미국 내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듯하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ICE의 단속 추방 작전을 기획한 파시스트 스티븐 밀러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이 전형적이다. 저술가 데버라 프리델이 지적해듯이 트럼프의 방식은 "부인하고, 반격하고,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패배를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ICE 기획자 발탁

그렇다면 트럼프는 이란을 또다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실행에 옮길까? 페르시아만 일대의 미군 전력은 계속 증강되고 있다. 중동 전문가 알리스터 크룩은 트럼프를 "장전된 총을 든 레임덕"이라고 일컫는다. 트럼프는 그 총을 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떤 공격을 가하더라도 단단히 무장하고 의지가 확고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무장 해제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란 공격은 공화당 내 분열도 심화시킬 것이다. 이미 부통령 J D 밴스는 전쟁을 공화당의 선거 패인으로 지목했다. 교전 재개는 서아시아에서 미국 패권의 쇠락을 십중팔구 가속시킬 것이다.

기디언 래크먼도 〈파이낸셜 타임스〉에 침통한 어조로 이렇게 썼다. "그런 변화는 중동의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유럽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중국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는커녕 미국 제국주의의 쇠퇴를 가속시키고 있다.

번역 김준효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과 좌파의 앞길은?
★ 방글라데시 현지 좌파가 활동가가 전한다 의류 노동자들이 대파업으로 양보 쟁취하다
★ 극우 세력의 인하대 이승만 동상 복원 추진·김문수 초청 강연 반대한다
★ 서평 《민주주의인가, 보나파르트주의인가?》 스탈린 복권과 선거제 개혁의 기괴한 동거

청해부대 파병은 “침략 공범” 되는 것

김종환

이재명 정부가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병안을 의결했다. 곧 국회에 파병안이 제출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을 착착 준비하다가 트럼프의 중간선거 패배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

트럼프가 선거 패배로 전쟁을 이어갈 동력을 잃었다는 성급한 낙관론을 언론들이 펴는 가운데 참전 반대 여론의 긴장이 누그러진 타이밍을 노린 듯하다.

지난주 국방부는 파병안 추진을 밝히면서 “청해부대 관련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이란을 비롯한 주요국과도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1월 9일 이란 측은 한국을 콕 집어 재차 경고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답했다.

“한국은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몇몇 해상 작전을 수행하려고 자국 군 병력을 역내에 파견하는 일을 삼가야 하며, 이미 충분히 복잡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같은 브리핑에서 이란 외교부는 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진 이마진

파병이 강행돼도 미국의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는 계속돼야 한다

“이란 국민은 … 미국,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 그 일부 동맹국 외의 나라들이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 곁에 서서 몇 달 전 군사 침략의 공범 자리에 스스로를 놓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청해부대 파병을 침략 전쟁의 “공범”이 되는 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쟁 관여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지 1주일도 채 안 돼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다시 격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는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백악관에 들어간 파시스트”라고 부른 스티븐 밀러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승진시키며 강경 노선을 거둬들일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란 전쟁에 앞장서 온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를 경질하라는 요구도 일축했다.

군대도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또 다른 항공모함이 11월 중순까지 중동에 도달할 예정이다. 무려 3개 항모전단이 이란을 에워싸게 된다.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애타게 요구하는) 대공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추가 제공했는데, 이란의 보복 공격을 부를 만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란도 공격받으면 이전보다 더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며 스스로에게 부과한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을 풀었다. 이란 국민들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해 방사능 대처 훈련도 받았다.

11월 9일 자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가 전면 폭격, 핵시설만 폭격하기, 이대로 시간을 끌기, 협상하기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의 두 선택지가 미국의 기대처럼 단기적인 전투로 끝날지는 불투명하다. 뒤의 두 선택지도 유가 상승을 막지 못하고, (트럼프의 선거 패배로 자신감이 오른) 이란의 양보를 이끌어낼 방안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내년 1월(아직 두 달이나 남았다!)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믿어서도 안 된다. 민주당 지도자들도 제국주의자들이고 이란에 결국 패배를 안겨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트럼프의 핵심 차이는 동맹국을 다루는 방식에 있는데, 지금 미국은 중동 동맹국들의 이반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란을 제압해야 한다.

이렇듯 현실은 중간선거로 트럼프가 전쟁 동력을 잃었다는 진단과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군대를 보내려 한다.

파병뿐 아니라 이란 전쟁 자체에 반대해야

이재명 정부는 “전쟁 관여 없다”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방장관 강신철이 국회 국방위에서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또한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해협 부근으로 확대하기 전에 의회 표결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지만, 그 말은 안 지켜도 그만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회 표결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고 작전 지역을 확대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방과 대외정책뿐 아니라 경제, 노동, 팔레스타인, 이주민 문제에서 뒤통수치기를 반복해 왔다는 점도 봐야 한다.

정부는 파병이 일단 강행되면 반전 운동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하다. 이라크전 파병 반대 운동도 2004년 전투 부대인 자이툰의 선발대가 출국하자 실제로 기세가 꺾인 바 있다. 반전 운동은 당시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더욱이 2004년과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자이툰 부대는 상대적으로 전선에서 떨어진 쿠르드 자치 지역에 주둔했다. 이라크 전역에서 점령 반대 운동이 벌어질 때도 쿠르드인들은 별로 가담하지 않았다. 반면 지금 청해부대는 미국이 이란 봉쇄 작전을 실시하고 있는 해역에 진입하게 되면서, 이란 전쟁 전체의 전황과 운명이 얽히게 됐다.

전쟁이 격화할 경우 청해부대는 어떤 형태로든 전쟁에 연루될 공산이 크다. 또한 미국에 제대로 “성의 표시”를 하려면 미국을 너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압력도 작동할 것이다.

전쟁이 간헐적 협상과 소규모 폭격 위주로 이어지더라도 청해부대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국방부가 기항지로 제시한 두큼항은 미 항공모함의 기항지로 이미 이번 전쟁에서 여러 차례 공격당한 바 있다. 이란이 한국을 본보기 삼아 다른 국가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 할 위험도 있다.

반전 운동 일각에서는 이재명에게 “약속을 지켜라” 하고 요구한다. 그러나 “전쟁 관여 없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애초부터 기만적이었다. 기만책을 기만책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운동을 헛갈리게 하는 효과를 낳을 뿐이다.

현재의 세력 관계하에서 민주당과 국힘은 정부의 파병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 확실하다.

이재명이 ‘평화 주권을 약속했던 대통령’이라는 환상을 부추기는 것은 파병이 통과될 시 운동 내에서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그 대신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를 이 전쟁에 긴밀하게 동여매고 있음을 봐야 한다. 그래야 파병이 강행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하고 운동의 방향 상실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반전 운동은 이재명에게 약속 이행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청해부대 파병이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에 기여하는 것임을 폭로하며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고, 파병이 이뤄지면 철군을 요구하고, 전쟁 자체에 맞서 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함께 참가합시다!

이란 전쟁 파병 반대 4차 집회·행진

이재명 정부는 청해부대 확대 파병 중단하라!

이란 전쟁 반대한다!
파병은 참전이다!

일시: 11월 14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주최: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
문의: 010-7550-2131

이재명의 망언에 분개하는 이주민 운동 활동가들

“이주민의 기여는 적은 게 아니라 넘친다, 사다리 뺏지 말라”

이재명이 연이어 이주민 비난 망언을 했다.
이주민 운동 활동가들은 이재명의 망언에 분노하며
이주민 차별이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QR코드)

존스 갈랑 카사마코(필리핀인 공동체) 사무국장



이주민 지원센터로서, 또 이주민 당사자로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많은 것을 구입합니다. 휴대전화, TV, 온갖 것을 사서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요. [한국에서 타고 다닐] 차도 삽니다. 아파트도 빌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 12시간을 일합니다. 이 노동이 없으면 생산물도 없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팔아서 시장에서 돈을 법니다. 그러니 기여가 적은 게 아니라 넘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차별이 있다느니, 이주노동자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느니 발언한 것은 잘못입니다.

대통령이 한 말은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준 것이에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따라하라는 신호 말입니다.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성평등가족부가 내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을 폐지하기로 지난 5월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교육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원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더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동안 교육활동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왔습니다. 제가 만나는 다문화가족 중에는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언어와 정보 접근의 장벽 때문에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언어와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을 줄인다면, 이미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놓아주는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은 마치 그 사다리마저 불공정한 특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박동찬 경계인의목소리연구소 소장, 중국 동포



그동안 이주민 혐오가 사회의 기저에 깔려 있었고, 계엄과 내란 정국을 거치면서 혐중의 형태로 집약적으로 표출됐는데요. 혐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에서 마련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역차별까지 운운하는 것이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에 SNS상에서 ‘역차별’이나 ‘특혜’라는 용어, 이주민 혐오 선동 게시물들이 급증한 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말에는 그만큼 무게와 파장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정제된 언어를 내놔야 하는데, 이번 발언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사회적 구성원의 범주에서 배제해도 된다는 정치적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그 사회적 해악이 이미 체감되고 있는 것이죠.

이번 발언은 ‘공정’ 화두에 민감한 청년층의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소위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닌지 추측해 봅니다. ‘에펨코리아’가 토론이 불가능한 공간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인용한 것은 선을 넘을 대로 넘은 것입니다.

이영 신부(성공회),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라는 게 이주민 아닌가요? 그러면서 지금도 굉장히 약한 사회통합을 완전히 뭉그러뜨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현행 반이민 정책(제도) 및 행정과 혐오 발언 등은 이주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내국인과 갈라치기 해서,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 증폭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정당화해 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독일에서 일했던 한국인 간호사·광원들이 독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었나요? 이주노동자의 송금이 저개발국의 경제를 뒷받침해 왔고, 한국도 그런 바탕에서 경제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왜곡하고, 다 무시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 추미애가 이민사회국을 없애고 이주민 관련 사업과 예산을 다 축소시키려는 시점에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으니, 전국 지자체들 역시 그 파급효과에 따라 그러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사인(신호)을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지금 농업 인구가 (가족을 제외하면) 대략 100만~150만 명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쿼터가 11만 명가량입니다. 여기에 고용허가제 농업 분야 노동자, 농촌의 결혼이주민을 포함하면 비중이 더 크다고 봐야죠.

제가 만난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었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일하고, 자신이 일한 노동의 대가인 급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브로커들에게 피를 빨리면서 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름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노동 강도가 높고, 그렇다고 체류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제도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번 돈을 자기 나라로 보내니까 한국에 도움이 안 된다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인터뷰·정리 임준형

‘국방’ 예산 또 대폭 증액하는 이재명 정부
군비 말고 복지 늘려라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군비 지출은 2조 8,87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SIPRI는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이 본격화하고, 각국의 군비 증강이 서로를 자극하는 위험한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정부의 2027년 국방 예산안은 73조 2,77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2퍼센트 증가했다.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의 모든 과정을 주도한 첫 예산안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국방비 증액은 군사력 증강이 이 정부의 핵심 기조임을 다시금 드러낸다.

2027년 국방 예산안의 핵심은 타격·전쟁 수행 능력 강화다. 특히, 무기 도입·개발 등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를 13.8퍼센트 증액하려 한다.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명분으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고도화하려 하고,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공격형 드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KF-21 전투기 양산 예산은 올해 1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천무 다연장로켓의 탄약 확보 예산도 1,803억 원에서 5,504억 원으로 세 배 넘게 증액됐다. 적 후방에서 작전하는 특수부대의 고공·수중 침투물자 예산은 98억 원에서 1,348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사진 이미진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은 전혀 지지할 일이 못 된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국방 예산 증액의 명분으로 제시한다.(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보도자료) 이재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라며 군비 증강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군비 증강과 무기 산업 육성·수출에 열을 올리는 이재명 정부 자신도 세계적 군비 경쟁의 한 축이다. 군비 경쟁을 부추기면서 그로 인한 안보 환경 변화를 다시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삼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군비 증강은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 명분으로도 이용된다. 김정은은 올해 6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이유로 북한의 핵무력과 전략적 군사자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거론하며 일본도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악순환의 밑바탕에는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이 있다. 각국 지배계급은 세계시장에서 자국 자본의 이익을 지키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적 우위를 추구한다. 이런 경쟁이 군비 증강을 부추기고, 각국의 군비 증강은 다시 경쟁을 격화시킨다.

다른 정부들도 “자주국방”과 비슷한 말로 군비 증강을 정당화한다. 독일 총리 메르츠는 지난 1월 대규모 ‘방위’ 투자를 주장하며 “우리의 안보를 우리 손에 맡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2027년 군 예산을 640억 유로로 늘리겠다며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다. 일본 외무상 모테기는 지난해 12월 “자기 나라는 스스로 지킨다는 기본 자세”를 강조하며 ‘방위’ 예산 확대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군비 경쟁을 벌이는 정부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수천 가지 방식으로, 수천 개의 신문에서, 수천 개의 연단에서 애국심, 문화, 조국, 평화, 진보를 외치며 떠들어 댄다. 이 모든 것은 대포와 드레드노트급 전함 등 온갖 파괴 무기에 수천만, 수억 루블을 새로 지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 지배자들의 말잔치를 믿어선 안 되고, 누가 이익을 얻는지 살펴봐야 한다.”(레닌, ‘누가 이익을 얻는가?’(1913))

누가 이익을 얻는가?

이재명 정부의 군비 증강은 한국 지배계급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적 지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대기업들은 해외 시장과 투자처, 원료와 공급망 등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한국 국가의 외교적·군사적 힘에 의존한다. ‘자주국방’이라는 구호에는 이런 계급적 이해관계가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군비 증강을 미국의 압박에 떠밀린 결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국방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좋은 기회”(외교부 장관 조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미 무역·안보 협상에서 이재명이 중국 잠수함 추적과 미군의 부담 경감을 내세워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 다른 나라 노동자들을 적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자국 정부의 군사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 지배계급은 단순한 영토 방어를 넘어 한국을 하위 제국주의로 성장시키려 한다. 이재명 정부의 대대적인 군비 증강도 이런 야심과 관련 있다.(관련 기사: 본지 586호, ‘한국은 하위 제국주의 국가인가? — 잠재태와 현실태’)

그러나 한국 지배계급의 이런 야심은 노동자들의 이익과 무관하다. 정부가 첨단 무기에 막대한 재원을 쏟는 동안 노동자 등 서민들은 주거난과 생활고, 부족한 공공서비스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군사력은 결국 다른 나라 노동자들을 겨누는 것이다.

따라서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노동계급 국제주의의 원칙이 중요하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을 적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자국 정부의 군사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군비 증강 반대와 노동계급의 요구를 연결해야 한다

최근 해외의 투쟁들에서 희망적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 노동자·학생 투쟁에서는 군비 증강에 쓸 돈을 복지와 교육에 쓰라고 요구한다. 10월 30일에는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국에서 군비 증강과 대(對)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11월 20~21일에는 자국 정부의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유럽 청년들의 동맹

▶ 7면으로 이어짐

이재명의 예산안, 누구의 미래를 위해 돈을 쓰나

당정이 소방 분야 긴급 필수투자에 2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2조 원 증액을 자신들이 먼저 제시했다고 내세웠다. 추미애의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일고 소방관이 목숨을 잃고서야 나온 뒤늦은 일보 전진이다.

그러나 재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거론된 미래대응기금으로는 한 차례 지원할 수 있겠지만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지금까지 교육에 쓰이던 재원을 소방으로 돌리자는 것이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는 잘 거론되지도 않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1월 27일 하루 파업에 나선다. 돌봄노동자들도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 요구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10월 29일 국회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역대 최대일 전망이라는데도 저임금에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은 뒷전인 것이다. '추가 세수 162조 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요란한 보도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며 … 국정 성과를 본격화하는 예산"이다(기획재정부). 이재명은 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라며, "모두의 성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온전한 이재명 예산안'의 핵심은 기업 투자를 국가가 떠받치는 데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은 11월 4일 국회 예결위 제안설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계 각국은 빚을 내서라도 AI 투자를 늘리는 등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은 …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다]."



사진 출처 민주노총

기업·군비엔 펑펑, 임금·복지엔 찔끔. 10월 29일 돌봄노동자 집회

정부는 추가 세수의 가장 큰 몫을 쌓아 둔다(104조 원 가량 금융기관 예치).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조차 보통 사람들의 절박한 필요에 돈을 쓰지 않고, 자본 축적을 뒷받침할 화폐 자본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약속했다. 그 목록은 이렇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예산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21조 3,000억 원).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력·용수·산단에 2조 1,000억 원을 선제 투입하겠다고 했다.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에는 설비 투자액의 최대 50퍼센트를 보조할 계획이다.

군사력 증강에도 돈을 쏟아붓는다. 특히, 무기 구입·개발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를 13.8퍼센트 늘린다. KF-21 전투기와 핵추진잠수함 확보 예산이 담겼다. (관련 기사: 이재혁)

반면, 복지 지출은 찔끔 늘었다. 정부의 총지출이 12.8퍼센트 느는 동안 사회복지 분야는 9.4퍼센트 느는 데 그쳤다. 총지출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준 것이다.

복지부가 요구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비 110억 원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보다 14.9퍼센트 줄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도 187억 원으로, 2020년의 4분의 1 수준이다.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율은 예상 보험료 수입의 18.6퍼센트로, 법정 기준인 20퍼센트에 못 미친다.(참여연대, 〈2027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반면, 'AI 복지·돌봄' 예산은 기존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데도 올해의 네 배가 넘는 235억 원으로 늘었다. 돌봄노동자들이 요구한 처우 개선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돌봄과 요양 예산을 홀대한 것은 한국의 복지 현실을 돌아보면 더 큰 문제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5.2퍼센트로 OECD 평균(22.1퍼센트)에 크게 못 미친다(2021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퍼센트로 OECD에서 가장 높다.

호황 세수가 지방과 교육청에 돌아가는 통로를 좁힌 것도 문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빼, 내년 보통·특별교부세를 현행 산식대로 계산했을 때보다 30조 5,000억 원 적게 편성했다. 이미 여러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말이다. 교육교부금도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 현행보다 32조 5,000억 원 줄였다. 정부는 이를 '지출 절감' 실적으로 내세웠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이 "821조 원짜리 초팽창 예산안"이라며 "예산 폭주와 혈세 탕진"을 막겠다고 한다(장동혁). 그러고는 여유 자금 104조 원을 전부 국채 상환에 쓰고, 정부 예산에서 27조 원을 깎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세수를 64조 원 넘게 줄이고 2023년 세수 펑크를 지방에 떠넘겼던 당이 이제 와서 빚 걱정을 하는 것이다. 부자에게는 감세를, 노동자·서민에게는 긴축을 들이미는 긴축 정당다운 처방이다.

그러나 여야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도 미래대응기금에서 12조 5,000억 원을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쓰려고 한다. 국힘도 AI 투자와 군비 증액 자체를 물론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어느 쪽도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자·서민의 삶을 우선하지 않는다.

성지현

▶ 6면에서 이어짐

휴업 투쟁이 계획돼 있다.

한국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군비 증강에 대한 반대가 커져야 한다. 군비 대신 복지를 늘리라는 요구가 만만찮게 제기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반미자주파 매체 〈민플러스〉의 11월 4일 자 사설은 반가웠다. 〈민플러스〉는 "전쟁 예산을 당장 폐기하라"며 "그 재원을 무너진 민생 회복과 사회안전망 구축, 불평등 타파를 위한 예산으로 온전히 재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주요 좌파 정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이 국방 예산안에 뚜렷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특히 진보당은 원내 유일 좌파 정당으로서 국방 예산 증액을 반대해야 할 책무가 있다.

물론 국회에서의 반대만으로 이재명 정부의 군비 증강 기조를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좌파 의원들은 국방 예산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증액에 반대하는 것을 통해 국회 밖 반전운동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진보당 국회의원들은 국방 예산을 삭감해 주거·의료·교육·돌봄에 쓰라고 요구하며 저항을 선동하고, 군비 증강 기조가 유지된 예산안에는 당연히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이재혁

11월 20~22일 국제 반전 공동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박이랑

프랑스 투쟁이 유럽과 세계 곳곳의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유럽 곳곳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봉쇄하고 거리로 나와 긴축과 군비 증강, 자국의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 지원에 항의하고 있다.

11월 5일 프랑스에서는 주최 측 추산 160만 명이 파업과 시위에 참가했다. 학생들은 경찰 탄압에 굴하지 않고 학교와 도로를 봉쇄했고, 철도·항만·병원 등지의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등지에서도 투쟁이 커지고 있다.

11월 20일 국제 '청년·학생 파업'을 포함해 오는 11월 20~22일에는 생계비 위기와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 공동 행동들이 예정돼 있다. 원래 올해 6월 영국 런던 국제반전회의에 모인 27개국의 활동가들은 11월 21~22일 징병제 부활에 반대하는 국제 공동 행동을 계획했는데, 그것이 점차 확대된 것이다.

유럽의 청년들은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교육·복지 삭감으로 미래를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각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을 지원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데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은 외친다.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싸우자!"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이미 전 세계 보통 사람들의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와 대학 점거, 무기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갈수록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권력자들은 갈수록 난처한 처지가 됐다.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선거에서 약진하고, 최근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공화당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실패를 겪었다.

지난 10월 30일 항만 노동자들의 국제 공동 행동은 노동계급의 계급적 힘을 행사할 가능성을 보여 줬다. 세계 22개국 113개 항구의 노동조합들이 이 행동에 참여했다. 프랑스에서는 항만 노동자 1만 4,000명이 파업했고, 이탈리아에서는 파업이 항만 외 부문으로도 확대되고 대규모 거리 시위와 결합됐다.

11월 20~22일 국제 행동은 이런 흐름을 더한층 확대할 기회다.

11월 21일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이 열린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도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경제 협력을 이어 가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추가 공격하려는 상황에서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해협 인근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군비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

정부는 '전쟁 관여는 없다'고 하지만,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이 벌어지는 해역으로 한국군을 보내는 것은 곧 전쟁에 관여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스라엘의 인종학살 지원과 미국의 중동 전쟁에 반대하는 행동이 크게 건설돼야 한다.

국제 공동 행동의 일환으로 열리는 11월 21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집회에서 전쟁 반대와 팔레스타인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철도 노동자: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변하지 않는 임금·처우 개선하라

철도노조가 11월 2~5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투표율 89.5퍼센트, 찬성 78.98퍼센트로 가결됐다. 철도노조는 11월 14일 서울역에서 철도 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23일부터 안전운행 투쟁 등에 나설 계획이다.

철도노조뿐 아니라 지하철 등 수도권 6개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김포도시철도지부·서해선지부·신분당선지부·지티엑스에이운영지부·공항철도지부)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는 안전인력 충원, 공정한 승진제도, 총인건비 제도 개선 등이다. 노동자들이 수년째 외쳐 온 요구들이다.

현재 철도 노동자들은 정원에 비해 약 200명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먼저 기존 정원의 1퍼센트를 줄여야 원하는 곳에 인력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인력 부족의 대가는 목숨이다. 지난 8월 의왕역에서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열차가 오는지 감시할 안전 인력이 없이 두 명이 일하다가 참사가 난 것이다. 2022년 오봉역 참사와 거의 똑같은 산재 사망이 벌어진 것이다.

전기 노동자들도 2인 업무로는 법으로 정한 열차 감시원조차 둘 수 없다며 3인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기관사들도 인력 부족으로 연차조차 쓸 수 없다며 사측을 성토하고 있다. "한 달 전에 줄 서도 연차 휴가 못 쓴다", "네 번 연속 연차가 잘렸다", "연차를 쓰려고 수십 명이 '오픈런'을 해야 했다" 등등.

부산기관차승무지부는 "여승무원들은 인력 부족의 상황에 눈치 보며 임신마저 숨기고 차를 타는 실정이다. 내가 쉬면 누군가 내 자리를 대신 때워야 한다는 미안함과 압박감에, 몸이 부서져라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료들이 태반이다" 하고 폭로했다.

그런데도 철도공사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시설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 등과 함께 열악한 숙소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설 노동자들은 야간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을 위해 눈을 붙여야 하지만 숙소는 너무 부족해 10명이 한 방에서 자고, 방이 모자라 탈의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도 적잖다. 비좁은 침식차(작업자 휴게용 차량)에 8~10명이 뒤엉켜 자는데 바로 옆으로 시속 100킬로미터가 넘는 열차가 지나간다.

정순익 시설국장은 "현재 예산 수준으로 전국 시설 처소를 개량하려면 92년이 걸린다"고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1인 1실 원칙을 2인 1실로 후퇴시킨 설계지침을 고집하고 있다.

임금을 옥죄는 총인건비 제도도 그대로다. 내년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은 3.9퍼센트 오른다고 하지만, 기본급 인상은 그에 못 미친다. 야간·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총인건비가 3.9퍼센트 인상

▶ 9면으로 이어짐

이스라엘

누가 총리가 되든 팔레스타인인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김인식

11월 8일 이스라엘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초그는 가디 아이젠코트에게 연립정부 구성 우선권을 부여했다. 아이젠코트는 앞으로 28일 안에 새 정부 구성을 시도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기한을 14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네타냐후 진영과 반네타냐후 진영 모두 선거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끔찍한 연정 조합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서방 정부들과 매스미디어는 이스라엘의 만행을 시온주의 국가 체제 문제가 아니라 네타냐후 문제로 협소하게 규정해 왔다. 지금도 매스미디어는 이스라엘 총선 결과를 보도하면서 대체로 네타냐후의 위기와 아랍계 정당들의 역할에 주목한다. '네타냐후 퇴진 + 반네타냐후 진영과 아랍계 정당의 협력'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사진 출처 Gadi Eisenkot (페이스북)

인물이 바뀌어도 이스라엘의 정착자 식민주의는 계속될 것이다

물론 네타냐후는 미국 등 서방의 무기를 사용해 가자 인종학살과 기아 조장, 레바논·시리아·예멘·이란 전쟁, 수많은 저항 운동 지도자 암살이라는 범죄 전력이 있는 전범이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 오히려 전례 없는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직면해 있고,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고립됐다. 크네세트(이스라엘 입법기관)의 교착 상태는 이런 위기의 정치적 표현이다.

하지만 아이젠코트가 연정을 구성해도 잔혹한 시온주의 국가 프로젝트는 가자와 서안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아이젠코트는 아랍계 정당들과의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내 원칙을 수용하는 아랍계 정당은 보이지 않는다." 아이젠코트의 동맹자들도 아랍계 정당의 연정 참여를 거부한다.

네타냐후 진영과 아이젠코트 진영 모두 인구의 5분의 1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연정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은 터전 위에 세워져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를 그 지역에서 관철하는 역할을 해 온 시온주의 국가의 본질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젠코트 진영의 최우선 과제는 특히 미국 민주당과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자면 가자 인종학살과 서안 인종청소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야 한다. 그들은 딱 거기까지만 할 것이다.

결국 네타냐후와 아이젠코트의 차이는 제노사이드(인종학살)와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의 차이일 뿐이다. 아파르트헤이트도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고통을 가했음은 불문가지다. 이스라엘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뿌리 깊은 인종차별 국가로서 계속 행동할 것이다.

아랍계 정당들의 선거 성공과 덫

이번 선거의 '사실상' 승자는 이스라엘 국가가 악착같이 "이스라엘 아랍인"이라고 부르는 '48년 팔레스타인인'들이라 할 수도 있다. 이들은 시온주의자들이 1948년에 팔레스타인인 75만여 명을 강제 추방했을 때 자신의 땅에 끝내 남아 있던 약 15만 명의 후손들이다.

이들은 테러와 탄압, 투표권 박탈 위협, 아랍계 정당들을 선거에서 배제하려는 시도 등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가 투표했다. '공동명단'과 라암당이 각각 11석과 8석을 얻어 네타냐후에게서 과반 의석을 앗아갔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는 점은, 아랍계 정당들도 덫에 걸려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초그는 아랍계 정당 '공동명단' 대표들에게 이란이나 가자지구를 상대로 중대한 전쟁이 벌어지면 정부 지지를 중단할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유세프 자바린 '공동명단' 대표는 확답을 피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네타냐후를 몰아내기 위해 선택됐으며, 가치와 평화를 추구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릴 것이다."

헤르초그의 압박은 바로 네타냐후 진영과 종교적·민족주의적 극우의 공격 노선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부 아랍계 정당이 좌파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혁명적 정당은 아니다.

공동명단은 네타냐후 퇴진, 팔레스타인의 민족적 권리 수호,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계 시민의 사회 정의 증진을 지향한다.

만수르 압바스가 이끄는 이슬람주의 정당 라암은 2021년 6월 나프탈리 베네트와 야이르 라피드가 이끄는 시온주의 연립정부에 참여했다.

그래서 아랍계 정당은 팔레스타인인 수탈을 계속 이어 갈 시온주의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설적 구실을 한다.

'기본법: 크네세트' 제7a조 (a)항은 "이스라엘이 유대인 국가이자 민주 국가로서 존재함을 부정하는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흑인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미국을 백인 국가로 인정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때문에 유대인 우월주의를 공고히 하고 팔레스타인계 소수민족을 박해하기 위해 구축된 체제를 정당화해 주는 선거에 과연 아랍계 정당이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의 역사적 논쟁점이었다.

예컨대, '아브나 엘 발라드'('조국의 자식들')는 정치적 눈속임에 불과한 선거에 참여해 이스라엘의 정치 질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를 거부하고(크네세트 선거 보이콧), 의회 시스템 밖에서 자신들 공동체의 권익을 지키는 싸움을 선택했다.

▶ 8면에서 이어짐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간·주말 업무 등이 많을수록 수당 할증 인상분을 반영하면 기본급은 적게 오르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런 불합리한 총인건비 제도를 개선하라고 십수 년째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승진도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남의 일이다. 재정경제부가 상위 직급 정원을 줄이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일반심사 승진의 92.7퍼센트, 특별승진의 100퍼센트가 본사·본부 직원 몫이었다. 승진이 적체되면, 그에 따른 임금 인상도 억제된다.

이처럼 노동자들은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변하지 않은 임금, 인력, 처우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급 초과 세수 속에 기업 지원과 국방 예산은 대폭 늘리면서도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과 처우 개선, 인력 충원은 뒷전이다. 이런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하는 철도 노동자들 투쟁은 정당하다.

정선영

프랑스 투쟁: 노동자 파업이 또다시 선포되다

김준효

프랑스에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11월 7일 토요일에도 프랑스 전역에서 약 25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그날 4만 건에 이르는 검문검색을 하고 300명 가까이 연행했지만, 시위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도심을 행진했다.

이틀 전 11월 5일에 대규모 동원을 한 직후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기세와 규모였다.(현지 취재기 '11월 5일 160만 명 파업·시위 — 투쟁은 계속된다'를 보시오.)

11월 5일 행동은 전국 260곳에서 동시에 벌어졌고, 총 참가자는 그 전 최대 시위의 갑절이었다.

그날 행동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학생들의 분노와 에너지가 노동자들의 힘과 만났다는 것이다. 철도·정유 부문 등에서 노동조합들이 하루 파업을 벌였다. 전체 중등교육 노동자의 52퍼센트가 파업했다. 2년 만의 최대 규모였다.

파업은 이윤에 타격을 가하고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노동자들의 특별한 힘을 보여 준다.

11월 5일 파업에 고무돼 파업을 지속하자는 촉구도 나오고 있다. 몇몇 정유 노동조합들은 6일에도 파업을 이어 갔다.

중·고등학생 단체들과 전국중등교육노조(SNES-FSU) 등 교직원 노동조합들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11월 10일 노동자-학생 공동 행동을 선포했다. "운동이 정부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지금, 동원을 더 널리 확대하고 압력을 키워야 한다."

인종차별 반대 연대체 '연대와 행진'도 10월 24일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 당대회 반대 시위와 11월 5일 하루 총파업의 후속으로 11월 13일 금요일에도 반파시즘 행동을 예고했다.



사진 출처 Guy Smallman

11월 5일 파업 집회 학생들의 활력과 노동자의 힘이 만났다

부스러기

11월 5일 전국적 하루 파업·시위 직후 프랑스 총리 세바스티앵 르코르뉘는 노사정(노동조합-기업주-정부) 3자의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정부가 노조 관료들의 협조 없이 강경책만으로 투쟁을 제압하지 못한다는 시인이기도 하다.

정부가 2주 전(10월 21일) 대화를 제안했던 것도 10월 17일 저항자들이 폭동으로 위력을 과시한 직후였다.

그러나 정부가 양보할 여지는 많지 않다. 심각한 부채 위기와 경기 침체, 국제적 경쟁에 직면한 정부는 긴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602호 '참담한 교육·사회 환경: 프랑스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10월 21일 르코르뉘가 내놓은 것은 학생 대표들의 말처럼 "부스러기"에 불과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짐짓 오만한 태도로 "부스러기"(연봉 35만 원 인상, 공공부문 기본급 동결)를 내놓았다. 〈뤼마니테〉는 "정부가 산고 끝에 쥐 한 마리를 낳았다"고 개탄했다.

RN은 그조차도 반대했다. RN 하원 원내대표 셰뉘는 그 정도 인상도 기업의 부담을 키울 거라며, 최저임금 문제로 양보한다는 정부의 접근법 자체를 문제 삼았다. RN은 "질서의 당"을 자처하며 10월 17일 이후 줄곧 시위대 집단 처벌, 미성년자 시위대의 가족 수당 삭감, "외국인 시위대" 추방을 선동하고 있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르코르뉘의 대화 제안을 환영했지만, 정부의 양보안은 가장 온건한 관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11월 17일 두 번째 하루 파업을 선포했다. 그날은 역사적인 '노란 조끼' 운동이 시작된 지 8주년 되는 날이다.

다른 유럽 나라들도 하루 파업

프랑스에 뒤이어 스페인에서 11월 11일, 이탈리아에서 11월 20일, 포르투갈에서 11월 21일, 벨기에에서 11월 23일, 그리스에서 11월 25일 전국적 수준의 하루 파업이 예정돼 있다.

이 파업들은 비록 하루 파업이지만 투쟁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11일 스페인 전국 파업은 마드리드에서 이미 무기한 파업 중인 교사들을 고무하고 기층에서 파업을 확산시킬 수 있다.

또, 11월 20~22일에는 국제 공동 행동이 크게 열릴 것이다. 프랑스·영국·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벨기에 등 유럽 7개국 노동조합들과 단체들이 이날 행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단체들은 20~22일에 각국에서 전쟁과 군국주의화에 반대하고, 생활고 심화에 항의하며, 이민자 핍박에 맞서자고 호소했다.

그 외에도 유럽 10여 개 나라에서 같은 기간 행동이 열린다.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그 호소에 연대해 11월 21일(토) 오후 2시 서울 집회를 주최할 예정이다.(관련 기사 8면)

프랑스 청소년이 말한다

"모두가 우리를 폭력적이라 비난하지만, 우리의 폭력은 정당합니다"

쥐가 나오는 교실, 열악한 복지, 인종차별적 천대에 격분한 청소년들에게 프랑스 경찰은 야만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학생들을 조준 사격하고 섬광탄을 터뜨려 손을 절단했다.

경찰은 시위 청소년들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프랑스 시민단체 '디스쿠르'는 9월 28일 이래 경찰의 시위 참가자 성추행 사례 15건을 지난주에 폭로했다. 피해자 중 12명이 20세 미만이었다.

폭로 내용은 끔찍하다. 검문검색 중 성추행, 연행자 강제 탈의, 경찰봉을 동원한 구강·항문 성폭행 위협 등.

'디스쿠르'는 경찰이 2012년 이후 12년간 최소 429명을 성추행·성폭행했다고도 폭로했다. 피해자의 18퍼센트가 미성년자였고, 가정폭력 신고 여성, 난민, 장애인 등 차별받는 이들이 많았다.

저항에 나선 이들의 폭력은 그런 폭력에 맞서고, 또 그들이 늘 겪는 박탈과 천대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지만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항의이기도 하다.

파리 도심의 엘렌 부셰 고등학교에서 진압 경찰에 맞서 싸운 학생 아엘은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전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청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봉쇄하고 나서야 우리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엘의 동료 학생 힐다는 "경찰 폭

▶ 11면으로 이어짐



매우 위험한 레임덕 트럼프의 이란 추가 공격 가능성

김인식

중간선거에서 굴욕적 패배를 당한 뒤 트럼프는 이란 추가 공격과 관련돼 상반된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강력한 합의"가 있으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재개 "필요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파병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파병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본 듯하다.(관련 기사 4면)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트럼프가 공격을 준비하면서도 이란의 허를 찌르기 위해 외교적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두 차례나 보여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도 승리를 필사적으로 원하고 있다. 로버트 페이프 시카고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굴욕을 당한 지도자들은 항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위를 높인다. 권력은 그들의 핵심 자산이며, 굴욕은 그 권력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란에 추가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실제 행동을 보면, 페르시아만의 미군 전력은 계속 증강되는 중이다. 미 국방부는 9월 말 샌디에이고에서 해병대를 태운 다양한 수륙양용 상륙함과 함께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배치했다. 10월 말경 〈AP 통신〉은 최신 병력 배치로 수백 대의 항공기를 포함해 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2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군은 지난주에만 케슘섬을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지역을 세 차례나 타격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란 타격을 "경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의 반응은 달랐다. 지난주 토요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2,000킬로미터로 설정한 탄도미사일의 자체 사거리 제한이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지리적 한계 없이"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라는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2,000킬로미터 너머에는 유럽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그동안 유럽 정부들은 미국의 이란 전쟁에 중립을 지키거나 반대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지원하고 있었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는 이렇게 털어놨다. "'거대한 분노'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에서 5,000대의 군용기가 출격했다. 유럽을 전력 투사 플랫폼으로 삼지 않았다면 '거대한 분노' 작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압력

사실 트럼프는 전쟁으로 치러야 할 정치적 대가는 이미 다 치른 셈이다. 그 대가를 트럼프에게서 다시 징수할 선거 일정은 없다.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압력은 중간선거 이후 사라졌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의 추가 공격 결정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전쟁을 반대하지만 이란의 역내 영향력이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공화당과 견해를 같이한다.

저명한 탐사 저널리스트 시모어 허시는 민주당이 전쟁 종식에 별 열의가 없음을 비판했다. 선거 승리 다음 날 민주당의 새 하원 사법위원장을 맡을 제이미 래스킨이 한 케이블 뉴스 쇼에서 팔레스타인 인종학살,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저 트럼프에 충성한 행정부 관료와 공화당 의원들을 향한 복수에 대해서만 유쾌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란 추가 공격에 나서면 트럼프 행정부의 분열은 커질 것이다. 부통령 J.D. 밴스는 중간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지목했다. 그러자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는 발끈하며 전쟁 지속 의지를 강조하는 영상을 곧바로 SNS에 올렸다.

그러나 미국이 추가 공격을 하더라도 이란이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전쟁의 대가를 세계인 모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싸운 적수는 없었다. 베트남민족해방전선도, 탈레반도, 무크타다 알-사드르를 비롯한 이라크 저항 세력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란 정권은 매우 의도적으로 그런 전략을 폈다. 미국이 시작한 이 전쟁으로 전 세계인이 고통받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는 이 전쟁으로 세계의 어느 부분이 고통받게 될지 통제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아무 대비가 돼 있지 않(았)다. 트럼프가 추가 공격에 나서더라도 미국의 서아시아 패권 침식을 되돌리지 못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은 맞물리나

7월 한 달 동안에만 20척이 넘는 러시아 선박이 카스피해를 건너 이란 항구로 드론 부품, 탄약, 폭발물을 실어 날랐다. 7월 하순에 우크라이나는 카스피해에서 이란 선박을 공격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모흐센 레자이가 최고 지도자의 친서를 들고 푸틴을 만났다. 이란 측은 러시아에 S-400 방공 시스템을 요청했다. 그리고 푸틴은 이란의 무장을 더 지원하는 쪽으로 다가서고 있다.

그러자 지난주 토요일 미군 중부사령부는 육상 국경과 카스피해를 통한 이란의 무기·물자 등 운송을 막기 위한 '아이언 게이트 TF'를 출범시켰다.

이는 이란 전쟁의 창끝이 러시아의 대(對)이란 생명선을 겨누고 있음을 가리킨다.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사격권 안에 들어설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 10면에서 이어짐

력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제 친구 중에는 뼈가 부러진 애들도 있어요.

"모두들 우리가 폭력적이라고 비난하지만, 저는 우리의 폭력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우리에게 폭력을 휘두를 때, 폭력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게 할 최후의 수단이에요.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에 썼잖아요. '1,500년 동안 먹구름이 모이고 있었다. 1,500년 만에 먹구름에서 일성이 터져 나오니 당신들은 천둥이 쳤다고 구름을 탓한다.'"

힐다는 이렇게 덧붙였다. "어디서든, 무엇이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해요."

좌파가 할 첫 번째 일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한편에 서는 것이다.

웹사이트에서 '**[긴 글] 기성 미디어의 프랑스 10월 폭동과 약탈 비난에 속지 말라**'를 함께 보시오.

노동자 연대 ws.or.kr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을
정기구독/후원하세요
ws.or.kr/subs2



사진 출처 국민의힘

조작기소특검법 논란

극우의 공세, 시간 끌며 버티려는 이재명 정부

우파는 조작기소특검법을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라며 연일 장외 투쟁으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이 건으로 국힘 내 극우파와 비극우파, 무소속 한동훈, 이준석의 개혁신당 등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극우 주도 하에 반이재명 우파 결집의 쟁점이 된 것이다.

국힘 지도부는 11월 7일(토) 청와대 인근인 경복궁역 도로에서 장외 대중집회를 열었다. 주중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의원총회, 지도부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매일 벌이고 있다.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재판 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와 서해 피격 사건 수사, 그리고 윤석열 탐사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사 명예훼손 혐의 수사 등이 포함됐다.

2022년 대선 투표 직전 〈뉴스타파〉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김만배 인터뷰를 내보냈다.

윤석열의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뉴스타파〉는 물론 이 보도를 중계식으로 보도한 MBC·JTBC 등까지 대대적인 강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부 비판 보도를 초반부터 틀어막으려 한 것이다.

한편, 조작기소특검은 극우의 이재명 정부 공격에 대한 여당의 맞대응 카드 성격이 강하다.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해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재판 기록만 7만 쪽이 넘는 이재명 재판을 며칠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2심 판결을 신속하게 내리려 했다. 출마 자격을 빼앗아 이재명 당선을 막으려는 대법원의 명백한 대선 개입이었다.

반대 여론으로 2심은 보류됐지만, 이 재판들이 대통령 당선 후 계속돼야 하는지를 두고 또 다툼이 벌어졌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국정 안정을 위한 면책특권)고만 했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가 헌법 해석의 문제라는 것은 법리 문제가 아니라 정치 투쟁의 문제라는 뜻이다.

조희대

정치적 문제인 만큼 올해 봄까지는 이재명의 높은 지지율이 재판 재개 가능성을 막아 왔다. 정부가 약화돼 레임덕 위기에 빠지면 극우화된 국힘은 재판 재개 압박을 본격화할 것이고, 조희대는 언제든지 응할 것이다. 이는 이재명 임기를 건 권력투쟁 개시 신호일 것이다.

의석수가 많이 모자란 국힘이 탄핵 운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재판 재개 카드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조희대가 우파 결집의 기수 구실을 한 것이다.

특검은 바로 그 재판들의 수사·기소를 다룬다. 그동안 대장동 등 개발 비리 수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의 악의성과 무리함이 많이 드러났다. 애초 명백한 정적 제거 수사였다.

그러나 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만한 "계획된 조작 기소"임을 명명백백히 밝혀낼지는 사실 미지수다.

이재명의 오랜 최측근인 정성호(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도 장관 시절 법무부 내 팀을 꾸려 이번 특검 수사 대상 사건 중 일부를 조사했었다. 그런데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몫이지 수사의 몫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로 원하는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조희대가 재판 재개를 하지 못하게 억제기 구실은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날부터 최대 200일(수사 준비 20일, 수사 기간 최장 180일)을 쓸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조희대의 대법원장 임기가 종료된다.(6월 6일)

요컨대, 이재명 정부는 조희대 탄핵, 철저한 내란 청산, 개혁 염원 부응 같은 일들을 모두 불철저하게 수행하거나 배신함으로써 극우에 정국 주도권을 내 주고는 겨우 시간끌기 정도만 기대할 수 있는 카드로 극우 공세에 대응하는 셈이다.

조작(거짓) 기소를 수사하는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도 없다. 이재명이 국힘의 삭제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이것이 오히려 더 일관성 없다.)

조희대 법원의 재판 재개 압력을 상쇄하는 데 목표가 있기에 이 법에 대한 위헌이나 공정성 시비는 부차적이다.

요컨대, 이 법을 둘러싼 투쟁은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 수사와 사법 권력을 이용한 우파의 이재명 정부 견제를 둘러싼 정치적 투쟁이다. 다만 극우파가 주도하는 국힘이 차기 집권을 노리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국힘의 공세에 반대해야 한다. 특검 반대는 재집권을 노리는 윤어게인 극우파를 도울 뿐이다. 윤석열의 정적 제거용 수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쿠데타 세력 청산과 극우 반대에 전혀 철저하지 않고 이란 전쟁 파병, 노동 개악, 이주민 망언 등 우파가 좋아할 일을 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규탄과 투쟁을 삼가서도 안 된다.

김문성